

토 론 회

<2017년 대선후보에게 바란다⑩>

대선공약과 대한민국의 미래

| 일 시 | 2017년 4월24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순화동 소재)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회 순 ————■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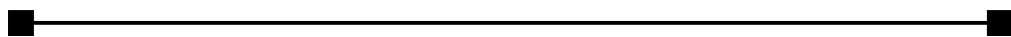
- 조 동 근 (명지대 교수)

패 널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황 인 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 현 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질의·응답

폐 회



■———— 목 차 ————■

패 널 토 론

“‘저성장 구조화’ 고착시키는 분배주도 국민성장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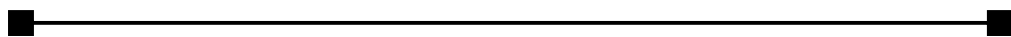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대선공약과 대한민국의 미래(1)”

- 황 인 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선공약과 대한민국의 미래(2)”

- 김 현 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대선후보에게 바란다⑩>
대선공약과 대한민국의 미래

패널토론

'저성장 구조화' 고착시키는 분배주도 국민성장론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 프롤로그

‘지지표를 모으는 능력’과 ‘국정을 수행하는 능력’은 사실상 무관하다. 선거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각 당의 지도자들은 지지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기영합적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선거공약은 선물 보따리에 다름 아니다. 선물 값을 누가 계산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2차 대선 후보자간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올리는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을 묻자, 놀랍게도 당사자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필요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합의’가 만능일 수 없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을 5만 달러로 올리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대선후보자의 ‘경제 지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 1】은 참여정부 이래 3개 정부의 경제성장률과 세계평균 실질성장률을 비교한 것이다.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올수록 실질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외 경제환경은 최상이었다. 별다른 국제적 경제위기가 없었고,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한국은 거대한 수출시장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셈이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은 초라했다. 5년 성장률평균치(4.48%)가 세계경제성장률 평균치(4.78%)를 밀돌았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률 평균치는 3.20%로 참여정부 평균치 4.48%에 비해 낮아졌지만 나름 선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했다. 그럼에도 세계평균성장률(2.88%)을 웃도는 경제성과를 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정은 다시 악화됐다. 4년 성장률 평균치가 2.95%로 낮아졌으며, 이는 세계평균성장률 3.18%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별 성과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스스로 ‘확실편향’에 포획됐다. “기득권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고 공언한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됐다. 이 같은 확신은 “이성에 기초를 둔 정부조직을 통해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윤리적이고 이상적인 경제 질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좌파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위에 군림하면서’ 백지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 시장경제 질서를 짜 넣을 수는 없다. ‘시장의 복수’를 자초했다.

이명박 정부가 세계평균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과잉’을 제어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었기 때문에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도 플러스 0.7%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2010년에 한국이 G20 의장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2009년의 경제성과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2010년에는 6.5%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도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성장률이 꺾였다. ‘공정사회론’ 제기와 무관하지 않다. ‘공정사회론’은 그 후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 ‘경제민주화’에 함몰되면서 성장궤도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 임기 3년차에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혁신’으로 돌아섰지만 노동개혁에 실패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대의 저성장’이 구조화됐다.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이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던 한국경제는 이제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쫓아가기도 바쁜 ‘저성장국가’로 추락했다. 한국경제의 현안은 성장페달을 밟아 성장 잠재력을 보존하고 ‘저성장의 구조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좌파진영 유력 대선 후보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표 1】 최근 3개 정부 세계평균 경제성장률 대비 경제성장률 비교

	년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세계평균 실질성장률	총고정자본형성	노동소득분배율
참여정부	2003	2.9	3.7	4.8	59.6
	2004	4.9	4.9	2.9	59.1
	2005	3.9	4.6	2.0	61.2
	2006	5.2	5.3	3.6	61.8
	2007	5.5	5.4	5.0	61.2
		4.48	4.78	3.66	60.58
이명박정부	2008	2.8	2.8	-0.9	61.9
	2009	0.7	-0.6	0.3	61.9
	2010	6.5	5.1	5.5	59.4
	2011	3.7	3.8	0.8	59.9
	2012	2.3	3.3	-0.5	60.9
		3.20	2.88	1.04	60.80
박근혜정부	2013	2.9	3.3	3.3	61.7
	2014	3.3	3.4	3.4	62.8
	2015	2.8	3.1	5.1	63.2
	2016	2.8	2.9	5.2	64.0
		2.95	3.18	4.25	62.93

출처: 국내경제성장률 한국은행, 세계경제성장률 IMF

2. 활력을 상실한 한국경제

1) 성장동력 고갈과 구조조정 실기

“서산에 해는 지는데 아낙네의 갈 길은 멀다. 머리에는 천근만근 보따리가 올려져 있고 등에는 어린 자식이 업혀져 있다. 그런 아낙네의 손을 잡고 걷는 녀석은 힘들다고 칭얼댄다.”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은유한 것이다.

그 동안의 먹거리는 점차 소진되고 있는데 새로운 먹거리는 오리무중이다. 가계부채는 경기회복을 짓누르고 임계점에 도달한 청년실업은 세대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자체 생존능력을 상실한 채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은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있다.

【표 2】는 제조업 기업경영분석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 2010년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6.7%이었으며 매출액 증가율도 18%로 높았다. 투자인 유형고정자산증가율도 11%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낮아졌다. 2014년에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196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초유의 현상이다. 2014년, 2015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2015년에는 10%를 넘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과다고용’을 하고 있었다. 2010년, 2011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그 후 매출이 뒤따라 주지 않아 ‘과잉설비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가 야기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구조조정은 고용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책 아젠다가 되기 어렵다. 경제는 일종의 생물이다. 군살을 빼야 새살이 돌아난다. 구조개혁의 표류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좀비기업이 늘어났다. ‘too big to fail’로 대변되는 ‘대마불사’가 재벌의 생존논리였다면, 좀비기업은 ‘too many to fail’을 자기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고용유지 관성에 이끌려 좀비기업을 끝까지 끌고 갈수는 없다. 좀비기업들이 움켜지고 있는 자원을 방출하지 않으면 경제의 신진대사는 원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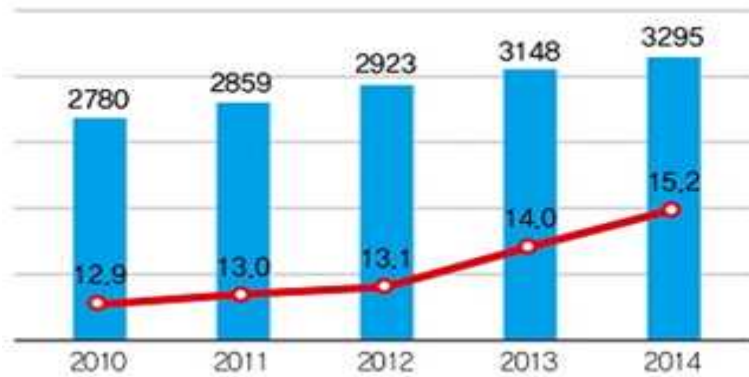
2014년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400%이지만 한계기업으로 내려가면 이자보상비율은 크게 낮아진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5.6.30)에 의하면 2014년말 2만1700여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못 미치는 기업이 3,295개로 밝혀졌다.【그림 1】참조) 이는 총 외감기업의 15.2%로, 2009년 말 12.8%(2,698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증가해, 대기업에도 부실이 만연되었다.

【표 2】 제조업 기업경영분석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금융비용 부담률	인건비대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2009	5.83	404.05	1.44	8.84		
2010	6.72	558.04	1.20	8.53	18.49	11.22
2011	5.57	486.02	1.15	8.19	13.55	9.80
2012	5.13	455.35	1.13	8.45	4.21	6.39
2013	5.25	513.57	1.02	9.05	0.51	4.75
2014	4.21	412.21	1.02	9.91	-1.59	3.24
2015	5.06	528.35	0.96	10.84	-2.99	5.2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지표(2009~),전수조사)

【그림 1】한계기업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

2) 가계부채 뇌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이다. 【표 3】은 분기별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가계부채증가율,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정리한 것이다. 부채비율은 2013년 1/4분기에 130%를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6년 3/4분기에는 150%를 넘었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훨씬 빨랐기 때문이다.

【표 3】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부채비율(%)	가계부채 증가율(%)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2013.1/4	130.2	5.1	4.6
2013.2/4	131.5	5.5	4.1
2013.3/4	131.9	5.6	4.5
2013.4/4	133.9	5.7	5.0
2014.1/4	131.7	6.2	5.0
2014.2/4	132.3	5.7	5.1
2014.3/4	133.9	6.3	4.8
2014.4/4	136.4	6.5	4.6
2015.1/4	136.0	7.4	4.0
2015.2/4	138.6	9.2	4.2
2015.3/4	140.7	10.3	4.9
2015.4/4	143.7	10.9	5.2
2016.1/4	145.6	11.4	4.1
2016.2/4	147.9	11.1	4.2
2016.3/4	151.1	11.2	3.5

자료: 금융안정보고서(2016. 12)

차주(借主) 특성별 가계부채를 살펴보면 가계부채의 구조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저소득자의 가계대출 점유비율은 11%이며, 3군데 이상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점유비율은 30%를 넘고 있다. 【표 5】는 가계대출 위험군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중 비(非)은행대출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비은행대출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의 과반수 이상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이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표 4】, 【표 5】를 종합해 볼 때, 부채의 절대수준과 구조 모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를 짊어질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성장페달을 밟아야 한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표 4】 차주 특성별 가계대출 점유비중(2016. 3/4 현재)

신용등급별		소득수준별		다중채무 유무	
고신용	64.9	고소득	64.3	다중채무	30.7
중신용	27.7	중소득	24.6	비다중채무	69.3
저신용	7.4	저소득	11.1		

자료: 금융안정보고서. 2016. 12

【표 5】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중 비은행대출비중 (2016. 3/4 현재)

	전체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
비은행 대출 비중	42.3	74.2	47.3	52.3

자료: 금융안정보고서. 2016. 12

3. 문재인 후보 경제공약: 국민성장론

1)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의 경제 공약은 ‘국민 성장론’으로 집약된다.¹⁾ ‘국민 성장’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경제성장을 일구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여유가 있어야 소비가 촉진되어 ‘돈’이 돌 수가 있는 주장이다. 국민 성장이 기업의 성장,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성장론’은 ‘낙수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분배’를 견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²⁾ 국민성장론은 한마디로 ‘분배를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

국민성장론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압축된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현실화로 집약된다.³⁾ 여기에 중소기업이 임금인상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는 주문이 곁들여진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말하는 소득은 ‘노동 소득’ 즉 임금이다. 하지만 임금은 성장의 ‘수단’이 아닌 성장의 ‘결과’이다. 성장해야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인과관계를 도치시키고 있다.⁴⁾ 뿐만 아니라 임금은 하방 경직적이다. ‘금리’는 경기조절을 위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 임금은 그렇지 못하다. 임금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 소득주도성장은 분배함으로써 성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분배하겠다는 것인가. 성장 페달을 밟아 분배할 것을 만들어야 한다. 대중이

1) 공약집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민주화 시대가 되었지만 돈은 기업이 벌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이 성장하면, 자영업자, 전통시장,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2) 대기업 규제론자들은 대기업이 잘나가도 효과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다며 낙수효과를 부정한다. 친기업정책은 대기업 좋은 일만 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도 한다. 한국경제학회 주최 공동학술대회에서 조동근·빈기범 명지대 교수팀은 낙수효과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8113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중소 협력업체가 대기업에 납품을 많이 할수록 매출과 고정자산, 고용 등에서 성장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거래에 수반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어떤 기업이든 투자와 생산을 늘리면 다른 기업과의 거래도 늘게 마련이다. 기업과 경제의 성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쇄적 낙수효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1210751>

3)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올라가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고용을 줄이면, 청년,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부터 줄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부메랑이 돼 그만큼 양극화가 확대된다.

4) 정책은 철학에 기초한 과학이다. 따라서 정책은 ‘인과관계’에 대한 성찰을 그 기본으로 한다. 결과가 원인을 되먹이는 ‘환류효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정책이 시행돼야 기대할 수 있다.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인과관계다.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다. 마차가 움직이면 속도가 붙는다. 이것이 선순환이다.

반길만한 것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결코 낮지 않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2010년에 59.4%로 잠시 하락했을 뿐 박근혜 정부 4년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62.93%로 꾸준히 올라섰다. 자영업자 영업이익에 숨어 있는 임금부분을 합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이 보다 커질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타당성을 상실한다.

국민성장론은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 ‘낙수효과’를 부정한다. ‘당연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결함을 안고 들어간 셈이다. 낙수효과 부정은, “성장과실이 골고루 균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만 잘 나간다는 것이다. 매출에 비해 고용을 너무 적게 한다는 비판도 그 일환이다. 과연 그런가? 2015년 말 현재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9만6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9개 주요 계열사 협력업체는 4300여 곳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6만3000여명에 달한다. 6.3만 명은 간접고용인 것이다. 삼성전자의 연매출은 200조원이다. 그 중 삼성전자가 부품·장비·서비스 등 구매에 쓰는 돈은 2015년 기준으로 128조원이다. 이 가운데 60%인 75조원을 한국 관련 기업에 쓰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부정하는 억지이다.

【표 6】은 문재인 경제공약집을 정리한 것이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조치의 일환이다. 일자리 창출은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경제민주화 조치 중 ‘범정부차원의 을지로 위원회’가 눈에 띈다.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을’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10배를 징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벌을 ‘경제적 조폭’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납품단가 결정은 ‘사적자치’ 영역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려면, “악의를 갖고 은밀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쳐야” 한다. 하지만 납품단가가 내려가는 것은 ‘을 간의 경쟁’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납품하겠다는 경쟁자가 나타나서, 즉 또 다른 ‘을’로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지 ‘갑’이 팔을 비틀어서가 아니다.

【표 6】 문재인 후보 경제공약 요약

분야	정책	내용
재벌개혁	집중투표제	소액주주 권한강화, 총수일가 전횡억제
	노동자추천이사제	
	다중대표소송제	
	재벌 경제사범 무관용	집행유예 불가능 및 사면권 제한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 확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범정부차원 을지로위원회	재벌갑질 횡포 수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산분리 강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주주권 강화	제2의 삼성물산 사태방지, 국공채인수확대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OECD 1/3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창출	주 52시간 근무준수, 연차휴가 의무소진
	공정임금제	중소기업임금 대기업의 80%
	비정규직 축소	정규직 고용원칙, 법으로 확정
	청와대직속 위원회 신설	일자리 위원회 및 4차 산업위원회
	정부조직 개편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개편
	4차 산업혁명 지원	초고속 사물인터넷망구축, 소프트웨어 교수 1만명 양성

자료: 문재인 후보 공약집(필자 요약)

2) 재정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

문재인 후보는 증세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특혜적 비과세감면 폐지”는 그 변죽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공약집에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기본적인 수익률이 보장됩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습니다”는 언명은 ‘연금사회주의’로 가겠다

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국민연금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동액의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4. 문재인 공약 비판: ‘국가개입주의’의 치명적 자만

근본적인 질문에 천착해야 한다.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1962)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프리드만은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사회주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는 주지하다시피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요약된다. 그에 따르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생산된 결과물의 사회화’ 간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국가가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면, 이는 생산수단의 절반을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다. 고용주가 국가라면, 즉 자신의 생계를 국가에 의존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없다.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 이외에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민간 시장경제조직, 즉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무원을 대폭 늘리면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 사고도 허구이다. 공무원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명의 공무원을 충원하려면 그 공무원의 생계를 세금으로 책임져줄 10명의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 일자리 10개, 공무원 1명’의 비율이 유지돼야 지속가능하다. 십일조 헌금과 같은 원리이다.

국가는 ‘지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계산능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 대리인 정부 역시 ‘지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전지(全知)하다면 ‘국가의 개입’이 최대화된 사회주의체제가 더 효율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 ‘시장질서’를 대체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중심 경제’를 곳곳에서 강조한다. 문맥으로 보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읽힌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실존하는 인간 밖에 초월적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이런저런 이해관계의 이끌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군가의 이익은 다른 누군가의 손해를 수반한다.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처분법(각종 규제)은 오히려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문재인의 경제공약은 참여정부의 그것과 판박이다. 만약 문재인이 집권하면 ‘참여정부’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원칙에 충실한 사고를 해야 한다. “국부의 원천에 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는 ‘국부론’의 정식 책명이기도 하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라고 설파했다. “안정적인 정부, 예측 가능한 법률, 부당한 과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참여정부는 “큰 정부, 작은 시장”의 정책조합을 택함으로써 정반대의 길을 갔다. 문재인의 공약도 “큰 정부, 작은 시장”의 판박이다.

5. 부자에게는 경제자유를, 빈자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부자에게 세금을 빈자에게 복지를” 좌파적 정책 옳음(policy correctness)의 전형이다. 정부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에의 의존이 타성화된다. 민간의 활력을 꺾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여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 정부지출 규모에 대해 투표할 때 투표 자체가 투표자 자신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담한다고 믿도록 고안되어 있다. 비대해진 정부 조직은 ‘사적(私的)자치’로서의 시장영역을 좁힌다. 정부가 세금을 1원 덜 걷으면, 그 돈은 내 주머니에 남는다. 개인이 최고로 1원을 합목적으로 지출한다.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은 허구이다.⁵⁾

인간은 가능하면 고통스러운 노동을 피하고 타인의 노동의 결과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약탈이 노동보다 쉬우면 누구나 약탈을 택할 것이다. 규제, 보호, 장려 등의 명분으로 “누군가의 것을 덜어내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면” 입법을 요구하지 않을 집단은 없을 것이다. 경제문제를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을 통해 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를 통해 푸는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비중을 최소화해야 한다.

5) 규제공무원을 1명 줄이면 민간부문에서 ‘1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경제활력을 되찾으려면 “부자에게 세금을, 빈자에게 복지”를 류의 ‘정책 모범답안’의 도그마를 혁파해야 한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한다”는 식의 과장된 현실 인식은 필히 입법오류를 낳는다. 국부(國富)는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땀과 눈물 그리고 혁신에서 나온다. ‘자유주의, 시장주의, 법치주의, 선택과 책임, 배려’ 등을 핵심가치로 하는 우파적 공약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땀과 눈물, 자조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부자에게는 ‘경제적 자유’를 빈자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류의 선동적이고 교조적인 공약은 ‘저성장의 구조화’를 고착화시킬 뿐이다. 정치인은 ‘제한된 인간이성’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대선공약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정책

황 인 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개관

○ 경제 및 산업정책과 관련, 제19대 대선의 주요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 공약과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규제개선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

- 장기간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것 외에 경제제도의 비생산적 구조 및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 등으로 인해 OECD에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추락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의 엔진이 식어간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경고음은 이미 5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고 이에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경제혁신, 규제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함

- 장기간 저성장은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 불안, 소득 불안, 미래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와 정치권, 사회에 대한 불만을 높이는 원인

- 이에 제19대 대선주자들이 안보·외교 면에서는 극한상황으로 치달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관리를, 경제·산업정책에서는 온 국민의 관심사안인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 또한 주요 후보들은 스스로를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책임자라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부분임

○ 대선공약이 표방하는 목표는 엇비슷하지만 어떻게 일자리 창출 목표를 구현할지, 구체적 정책수단 및 방법은 주요 후보 간에 현저한 차이 노정

-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사람중심 경제-국민성장’의 기치 하에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 기호 2번 안철수 후보는 교육개혁을 통해 창의적·융합적 인재를 양성해서 과학

기술과 창업 혁명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 기호 3번 홍준표 후보는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이란 기치 하에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남는 재원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강조

-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는 1번과 엇비슷하게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

○ 여기서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산업정책을 비교·평가하고, 우리의 당면 현실을 감안하여, 차기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안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함

2. 제19대 대선 공약의 비교·평가

□ 문재인 후보: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 이룩’ / 공정·혁신·통합

○ 공공부문 · 공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81만 개, 5년간 21조원 투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 직종에서 17만 개

-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 34만 개

-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30만 개

↔ 반론: 지속가능성, 비용 대비 효과, 비생산적 기업가정신

○ 경제 적폐 청산

- 대기업 갑질 근절 →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단체소송제도 도입

○ 재벌개혁

- 10대 재벌, 특히 4대 재벌 개혁에 포커싱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 의무화

- 노동추천이사제 도입: 공기업 → 4대 재벌 → 10대 재벌

- 단독 주주권, 다중 대표소송,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와

- 경제력집중 억제: 10대 재벌 타깃, 지주회사 요건·규제(지분율 등) 강화

- 금산분리: 제2금융권을 단계적으로 재벌 지배에서 독립

- 사면권 제한,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의 경영참여 제한

-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 및 축소,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 정경유착 차단: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 제정
-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 스투어드십 코드의 즉각 도입 ↔ 이미 제도화?
 -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 정부 사업을 위한 국공채 발행에 연기금 투자
- 규제체제 재설계 :
 - 신산업 분야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 및 일몰제 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코리아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과기부 등 S&T 컨트롤 타워 재구축
 - 사물인터넷 1등 국가, 스마트 인프라,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전기자동차 강국(공공 구매),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2030년, 20%), 혁신도시 Two
- 자본시장 역동성
 - 사전 규제, 정부의 자금지원, 투자자 보호가 없는 벤처 캐피탈 시장 허용
- 중소기업 육성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간 지원, 1년에 5만명 지원
 -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및 연대보증제 폐지
 - 납품단가인하,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기업 처벌
 - 중소기업 R&D예산 현재의 2배 인상,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 안철수 후보:

- 일자리 : 생략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공정위 독립성 및 역할 재정립: 상임위원 증원(5→7), 임기 연장(3→5) 등
- 공정위 시장감시 기능 강화: 악의적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 제재 강화
-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담합 등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제23조 2) 규제 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 다중 대표소송, 다중 장부열람권 도입
- 기업범죄 형량 강화, 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 이사 자격의 제한 강화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
- 지주회사 규제 강화(20% → 30%; 30% → 50% 등)
-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 시장견제 기능 강화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 스튜어드십 토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 소비자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친족기업,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사항 공시 확대

○ 대기업 (추가)

- 전경련 해산: 자발적 해산 원칙 → 정부가 설립 취소 적극 검토
- 대기업 편중 조세감면 제도 축소 →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 분권, 협업, 축적

- 정부 주도 국가발전 패러다임 → 민간 주도로 전환
- 국가 R&D 체제 혁신:
과학기술 전담 독립부처 신설 및 연구개발사업 통합 관리
- 과학기술인력 대폭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규채용으로 5년간 4만 명 증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5년간 최소 10만 인재 양성(월 50만원*10만 = 6천억)

- 엔젤 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활성화

- 창업정책 5대 중점과제

(신산업 규제 합리화, 융자 아닌 투자 중심의 재정 지원, 실패 후 재도전 가능한 제도 마련·보완, 창업 아이디어·기술 인력 유출 방지책 등)

○ 창업 3대 기반, 5대 혁신 과제

- 3대 기반:

- 정부 주도에서 민간 지원 방식으로 전환(단기 성과 아닌 구조적 개혁)

- 정부조직 개편, 중소기업부 설치

- 규제혁명: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5대 혁신 추진과제

- 기업가에 대한 교육확대 (기업가정신 교육 정규과정 도입 등)

- 창업지원기관 육성(국책연구소를 벤처, 중기 전용 연구개발 센터로 전환)

- 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스톡옵션 현실화)

- 공정한 시장경쟁 구축

-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대책 마련 → 선한 특허 괴물

○ 조선산업 대책: 생략

□ 홍준표 후보: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 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 기술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50만 개 일자리
- 기술창업 활성화: 28만개
- 서비스 산업 활성화: 32만개
- 해외 진출 기업 U턴 활성화

○ 규제개혁

- 저금리 유지로 기업 및 가계 부담 최소화
-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폭 전환
-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 One-in, Two-out
- 일자리 창출 기업,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 핀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부 신설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 기타

- 노동시장 개혁: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 노조개혁 등
- 최저 임금 1만원, 임기 내 실현

□ 유승민 후보: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 창업하고 싶은 나라

-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 구축
(용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환경으로 전환, 성실경영평가 도입)
- 네거티브 규제방식에서의 전환
-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기업 스톱옵션 지원, 특허박스 제도 도입, 코넥스 시장규제 완화
- 벤처 캐피탈 설립 요건 대폭 완화
- 창업교육 → 우수 인재 양성
- 중기청,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중기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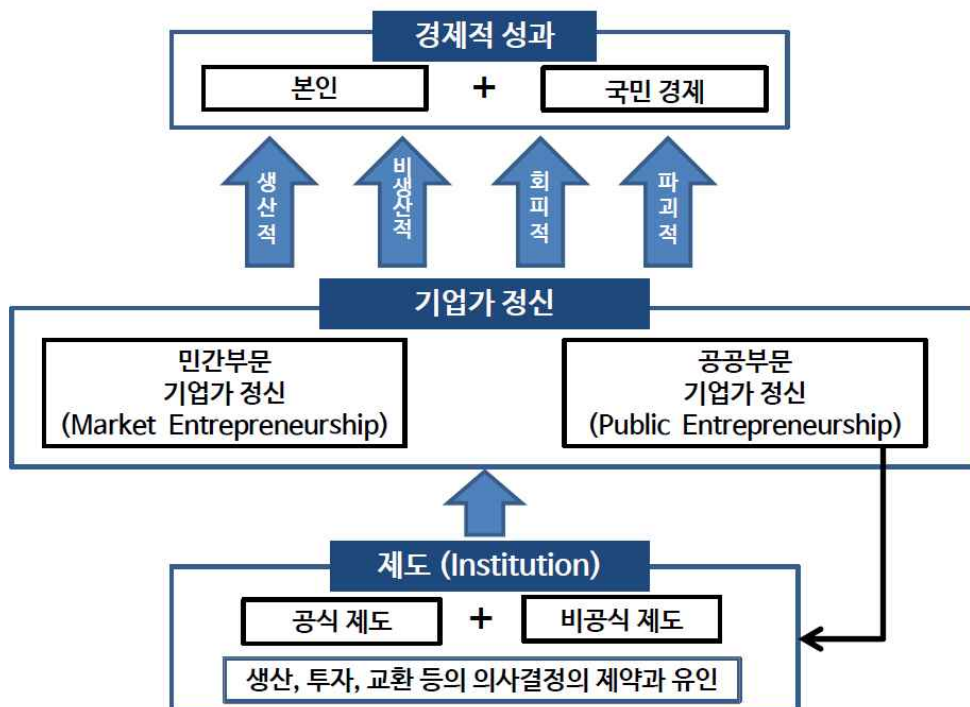
○ 공정한 시장경제

- 갑을관계 근절을 위한 특별법제정
-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행위금지 청구권 도입,
 -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다만,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
-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 금지 등
- 재벌 총수 제재 강화
 - 사면·복권 금지
 - 편법 상속·증여 차단 및 정경유착 청산
 -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참여 제한
 - *다만, 형법 및 상법의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히 규정, 경영판단원칙 도입
- 공정위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개선
 - 심사기능과 심판기능 분리
 - 경제분석 전담조직 및 송무 전담조직 확대
 -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3. 추가 고려 사항

1) 경제는 무엇 때문에 성장하는가?

-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동인은 무엇인가?
- 한강의 기적, 그리고 지금의 저성장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 생산적 기업가정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관건



2) 제도적 관점에서 한국의 당면한 문제는?

○ 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Institutions in general

항목	순위		항목	순위	
	'16	'15		'16	'15
재산권 보호 (Property rights)	42	45	정책결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gov't policymaking)	115	123
지적재산권 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49	52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 (Business costs of terrorism)	81	93
공공자금의 전용 (Diversion of public funds)	69	66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비용 (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55	68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Public trust in politicians)	96	94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69	83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Irregular payments & bribes)	52	46	경찰 서비스 신뢰성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	41	47
사법부 독립성 (Judicial independence)	72	69	기업경영윤리 (Ethical behavior of firms)	98	95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82	80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62	72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Wastefulness of gov't spending)	70	70	기업 이사회 의 유효성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109	120
정부규제 부담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105	97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97	95
법체계의 효율성(논쟁해결 측면)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50	57	투자자 보호의 강도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8	21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59	74	종합 순위	63	69

○ Edelman Trust Barometer



○ Low Economic IQ & Politicization

- 공공재?
- 사내유보금?

3) 몇 가지 유의 사항

① Nirvana Approach의 유혹에서 탈피

- 뜻이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 규제 신설, 최소 공배수가 아닌 최대 공약수 원칙으로 신중하게 !
- 시장, 경제의 정치화 현상 확산
→ 市場不仁/ 자기책임 원칙 확립

② 올바른 의미의 법의 지배 원칙 확립

- 원칙: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Gesetzstaat)’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 Rechtsstaat)’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 국회가 제정한 법을 국민이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
→ 법률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가의 문제
- 행정부 외에 입법부, 사법부의 각성과 적극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
(손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징벌적 손배제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가)
- 국민의 20%를 전과자로 만든 불합리한 Overcriminalization 개선
→ 法令滋彰 盜賊多有/
→ Over-criminalization is bad for the rule of law and capitalism.
→ 과도하게 형벌에 의존하는 행정제재를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

③ 도전과 혁신에 열린 규제 시스템을 통해 경제혁신 유인

- 지금 규제는 ‘1 기술-1 산업’의 추격형 산업화 시대에 형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존 대기업에 유리한 시스템
- 열린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自繩自縛 규제 혁신
- 도전과 혁신에 달려 있는 ‘열거주의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 칸막이 규제 장벽 철폐:
 - 1 기술-1 산업화 시대의 규제 프레임 및 규제사무분장 타파
 - 규제지대 삼각 철용성(regulatory rent-seeking iron triangle) 타파

- 필요한 규제는 善繩·善結 원칙하에 규제 품질 개선

- 善閉無關鍵而不可開 善結無繩約而不可解

- 불량규제 입법(안)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 治大國若烹小鮮,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④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전반의 혁신 역량

-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선전하기 위해 저마다 국가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는 중

- 정부 주도 하에 신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은 70년대 구시대적 발상

- 혁신의 주체는 민간,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생태계 조성자로 역할이 중요

- 조세 감면제도, R&D에 대한 조세지원은 경쟁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

⑤ 기업복지 제도 개혁: 혁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

- 기업 복지 보다는 국민 복지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

- 보호·지원과 차별적 규제에 기반한 중소 기업 피터팬 신드롬의 원인 시정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의한 중소, 신생기업의 기회 박탈 요인 시정

대선공약과 대한민국의 미래

김 현 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1. 4차산업혁명과 서비스산업관련 정책 전반

각 당에서 모두 제4차산업혁명의 영향을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구체성이 부족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원론적인 방향제시이거나 또는 단편적인 정책제시가 다수임.

제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산업구조의 큰 변화가 전망되고 인간 노동력과 기계의 협업 구조 정착 등이 과제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필요함.

즉, 인재육성전략 및 교육(정규교육과 평생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신산업창출전략과 유휴노동력 재배치전략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필요함. 청년실업 대책과 베이비부머 퇴직세대 대책도 이와 연계되어 있음.

2. 각 정당별 공약 관련

1) 더불어민주당

제4차산업혁명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준비하겠다고함. 스마트뉴딜,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전기자동차 산업강국, 신재생에너지시대, 혁신도시 시즌2, 창업국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재구축 공약함. 5060세대의 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동반창업 유도, 스마트제조업 부흥, 1인 제조기업시대 공약함.

거의 선언적 공약이며, 실현 방법에 대한 구체 언급 없음. 민간의 역할(전기차 강국)이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자율주행차 선도국) 공약도 있음. 창업국가 실현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잘 보이지 않음.

한편 갑질없는 세상 만들기, 규제체계 재설계 등은 장기적 과제이지만 시급히 그 기반을 구축해야할 상황이므로 적극 추진 필요함.

2)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부 신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공약함. 역시 선언적 공약이며 구체성이 없어 추진 의지 확인 어려움.

3) 국민의당

국가연구개발시스템 혁신, 경쟁구조 공정화, 창업정책 공약함. 과정감사로 전환이나 중복과제 허용 등 지엽적인 이슈들에 천착하고 있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달성 수단을 언급해야함. 국책연구소의 중소기업연구개발센터화 등 득실이 교차되는 공약들에 대해서는 비전이 제시되지 않아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중소기업부 설치와 정부주도에서 민간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등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철학의 공약들도 전체 비전과 공약 구체성이 부족하여 확인하기 어려움.

4) 바른정당

자수성가 가능한 환경구축, 혁신안전망 구축 등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임. 첨단 기술개발과 인재육성,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거래환경조성 등에 대한 구체 공약 제시 필요.

5) 정의당

생태경제고속도로와 사회혁신 공약함. 산업과 고용 양 측면에서 공약 제시한 것은 성숙한 공약 구조임. 국가혁신시스템 재설계는 바람직한 공약이나 장기적 설계도가 필요함. 실업 위험 대비를 위한 재교육시스템,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조세제도 및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비비앙차 6층(순화동)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